

공공성 VS 효율성

〈정부 조직화〉

〈법인화〉

지역사회·문광부 문화전당 운영주체 이견

정부가 지난 17일 국무회의의 결을 거쳐 확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 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공공성’과 정부의 ‘효율성’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갈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전당)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위상이 실추되고, 결국 추진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문화단체와 광주시는 전당시설을 법인에 맡기면 예산 확보가 어렵고 결국 전당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역문화단체의 입장은 확고하다. 문화전당 건립취지를 살리려면 정부 소속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전당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

●법인화 지역사회 입장

수익 추구기관 전락

안정적 재원 확보 안돼

또 문화도시 조성 차질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면 “본래의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어렵다”며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전당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문화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확보하려면 정부 조직으로 운영해야”=지역 문화단체는 문화전당의 법인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토대로 공익사업을 펼쳐야 할 기관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시민연석회의’ 측은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면 사실상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면 광주문화

●법인화 정부 입장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

예술·창의성 살려

복합문화공간 육성

자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효충남재단 사무처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전당을 국가시설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충원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성 위해 법인화 필요”=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을 창·제작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법인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그 사례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독일 세계문화의 집을 거론하고 있다.

문화전당 운영주체를 법인화하면 정부조직과 달리 수익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문화전당 법인 위탁에 대한 문화부의 중론은 “공무원 조직으로 문화전당을 운영하기 보다는 문화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하면 예술성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장은 “정부조직이건 특수법인이건 문광부가 전당의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국정원 댓글 의혹 파헤치고

채동욱 파문 긴급 질의하고

예산안 꼼꼼히 살피고...

민주당 54일만에 국회 복귀... 정국국회 정상화 시동

전방위 충돌 예고... 국감 빠르면 내달 7일 실시

민주당이 23일 국회 의사일정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난 3주간 파행을 겪었던 정국국회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우선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년도 결산심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즉시 전 상임위를 가동, 전년도 결산심사와 법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속히 분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과 별도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파문에 대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감 기관보고 준비나 증언·참고인 출석 등에 2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 국감은 이르면 내달 7일께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감이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국국회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원내 활동과 함께 장외투쟁도 계속하기로 해 여야 대치 정국은 정국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이 ‘매서운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세



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등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상임위별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원내 투쟁’을 종전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의 상임위선별 참여 및 결산 심의 거부 방침에서 선회해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응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방침은 제1야당이 국회를 비운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고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 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고 믿음을 얻는 바른길”이라며 “단

식하고 삭발하고 농성하고 의원직을 거는 결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일하겠다는 결기로 국정감사 등 의정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삭발·단식 농성, 의원직 사퇴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이 성공했던 때와 다르다”면서 “의원 한 명이 10만 개 촛불의 위력을 만들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 본관에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체제로 정국국회에 임하기로 했다. 나아가 54일째를 맞은 장외 투쟁도 전국순회

방식으로 전환해 강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민주당의 국회 전면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야당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보다 정치 공세에 집중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관에 ‘정국상황실’을 설치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구 활동 및 외국 행 자체령을 내리는 등 전열을 가다듬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늦었지만 정국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른 시일 내 정국이 정상화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투톱 “장외만으로 안된다”... 쌍끌이 투쟁 체제 구축

민주당 ‘투톱’인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전면복귀를 계기로 원내외에서 쌍끌이식 ‘야전투쟁’ 체제를 구축했다.

김 대표가 이날로 28일째로 맞은 ‘노숙투쟁’을 이어가기로 한데 이어 전 원내대표도 정국국회 기간 국회내에 야전침대를 마련, 한때잠을 청하기로 한 것이다. 각각 양대 대의 전선의 최전방 ‘공격수’임을 자임, 원내외 병행 투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투톱간 연합분담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상황변동이 없는 한 두 사람의 야전투쟁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국국회 전면참여 방침을 선언하면서 “원외투쟁도 강

화해야 한다”며 원외투쟁은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들이 원내 투쟁을 벌이는 사이 서울광장의 천막을 거점으로 삼아 원외 지역위원장들 및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장외에서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 원내대표는 “서울광장의 천막을 전방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 및 야권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도 보인다.

24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순회, 속식은 마을회관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해결하는 이른바 ‘이동식 풍찬노숙’ 투쟁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촛불세

력’과 국민연대를 결성, 대국민 홍보전의 전국적 조직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로 장외투쟁 돌입 54일째를 맞으면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시절 박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기록(53일)을 갱신했다. 장외투쟁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보한 당내 구심점을 강화,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도 엿보인다. 그는 이날 의총에서도 ‘매섭고 독한 투쟁’, ‘결기’, ‘진정한 야당성’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의지를 표명했다.

김 대표가 장외를 지키는 사이 전 원내대표는 ‘비상국회 운영본부’ 본부장을 맡아 24시간 국회를 지키며 원내투쟁을 총지휘하게 된다. 최고위원들도 각 본부를 책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연휴 끝나니 짜증이 더 밀려온다

“건강도시” 광주서 살고싶다!

3년 연속 대한민국 건강랭킹 1위 도시!

□ 2011~2013, 3연속 전국 16개 시도 건강지수평가 결과

(2013. 9. ELIO&컴퍼니 발표)

광주형 행복건강도시 구축 사업

□ 지역 “행복 공동체”구축

-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실시를 매월 1회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 장애인재활병원,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장애인 임신부지원사업을 합니다.

□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충만한 건강복지”실현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햇살방문보건사업단을 운영하여 돌봅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전담 병원을 운영합니다.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제공

-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합니다.
- 전국 최초로 야간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복건강도시”조성

-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으로 인권도시를 구축합니다.
- 응급의료체계 구축하여 응급실 도착시간을 단축시킵니다.

행복한 광주
건강도시

